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 앞장

전북자치도, 근무환경 조성 종합대책 수립·실행...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등 5대 중점과제 설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상호존중·일과 삶의 균형, 비상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일 사무실에서 김관영 지사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년으로 '도점점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백년대계'를 세우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직원이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추진했다.

자치도는 직원이 원하는 정책을 분석하고 중점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41%),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24%)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도는 이를 토대로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유연·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공감·소통 인사문화 정착, 공감·만족 후생복지 추진, 직원 업무역량 강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0개 세부 실행과제를 시행해 직인 생산성 제고 및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 성장과 참ूल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은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가와 사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유를 묻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여 '휴가는 자유롭게,



R&D 예산 복원 요구하다 제지 당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출·퇴근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직장 분위기를 통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최대 5일까지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도는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 등을 키울 도정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할 때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쉴 때는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쉴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가 사용을 권장한다. 아울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및 도외 지역 '위케이션'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결정을 추진하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결원 시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고 있어 업무 담당의 한계 등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한시임기제로 구성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해 신속한 결원 충원을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과 업무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

넘치는 직장 생활을 위해 직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때의 의미있는 해로 '상호 존중·일과 삶의 균형, 비상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 서겠다"며,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조국신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창당 경위와 신당의 계획, 정책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겠다”

신당 창당 선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전북 관련 '헌법에 지방분권공화국 포함... 지방분권 노력'

4·10 총선을 앞두고 가칭 '조국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색깔있는 제3당으로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좀 더 빠르고 강한 움직임 있는 인사와 정당을 통해 원내 3당의 역할을 이뤄내고 시대의 과제인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의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전 장관은 창당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앞으로의 3년 반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뿌리가 뽑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시민들의 분노·불만 해결을 위해 야권의 만능인 민주당과는 다른 방식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 3당의 강소 정당을 위해 뚝뚝씩 걸어가면서 모습을 보여주면 조국 신당이 어떤 것을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제3정당으로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앞서 빨리 움직이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역할이 구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와 관련한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은) 순서상 색깔 없는 정당이 전혀 안 될 것이다. 저의 기본 노선과 가치가 오히려 분명하다"며 "여기저기 옮겨 다닐 생각이 없다. 국회에서 캐스팅보트의 경우 민주당과 연합해 진보적 가치에 맞는 함께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특히 "몇 번 강조하지만 캐스팅보트 과정에서 시ết말로 국민의힘과 협상은 1도 없다"고 했다.

전주에 지인이 많고 이날 오전 대천 현충원 일정과 맞아 전북을 찾았다는 조 전 장관은 전북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대해 무조건 축하하지만 법안을 살펴보니 재정부분의 경우 좀 아쉬움이 보인다"며 "앞으로 헌법에 '지방분권공화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분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옛날에는 적어도 진보·보수를 떠나서 그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고 일갈했다. /뉴스1

“이준석 요구, 민주적인 절차 따라 해결하면 될 것”

개혁신당 김종민 최고위원 "통합 합의 허수아비로 만들면 안돼"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8일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 정책 전반을 지휘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배북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및 공천문제 등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모 언론사에 따르면,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 △배북주 전 정의당 부대표 비례대표 도전 의사 철회 △이준석 대표가 김용남·김민홍 공동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총선 정책 전반 지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기본 방향,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해보고 하기로 했다. 그게 잘못됐느냐"며 "선거운동의 전권을 준다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인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하는 대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으로 한다는 합의를 허수아비로 만들면 안된다"며 "이런 기본적인 합의를 깨리면 이에 걸맞는 논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지 그냥 최고위서

의결해서 다 깨지고 하면 합의는 무엇 하러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의 원칙을 깬다는 건 통합 합의를 흔드는 원칙, 합의정신 깬다 이걸 통합합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 배 전 부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배제하거나 처벌 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그분이 개인적으로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신청하겠다고 이 발언한 게 전부다. 절차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기류 변화 느껴져”... 민주, 총선 위기감 고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힘 37% · 민주 31%

친명-비명 공천갈등에 이재명 사천 논란까지 더해

개혁신당 창당도 악재로... 민주 지지층 표심 흔들려

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논란까지 겹치며 "이러다 공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제3차 통합 신당인 '개혁신당' 창당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접 조사에 비해 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4%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은 갤럽 조사에서 3~4개월간 33% 인파의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지지율 31%는 지난해 8월 5주차 27%로 떨어진 후 6개월여 만에 회복이다. 지지율 하락만 아니라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내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고질적인 친명·친문 간 계파 갈등에 최근이 대표가 측근들을 모아 비공개 회의에서 컷오

프(공천 배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시비와 사천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임혁백 공천위원장은 "말실 공천은 없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행보도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요인이다. 개혁신당이 새로 들어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흔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럽이 이번 여론조사에 넣은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문항에서 국민의힘이 37%, 민주당, 개혁신당이 각각 42%와 38%, 15%를 차지했다. 개혁신당 통합 전인 1월 넷째 주 발표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40%였다. 개혁신당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3%포인트, 민주당은 4%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14%가 개혁신당 지지를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17%가 개혁신당을 지지

한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지표가 가시화하자 민주당 내에선 "이러다 2022년 총선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임기인 집권 5년 차에 치러진 2012년 총선은 정권심판 여론이 높고, 민주당합당(더불어민주전진) 지지율이 여당을 앞질러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152석 과반을 달성했고, 민주당은 127석 확보에 그쳤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지난 14일 시사IN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012년 총선 당시 이명박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65%까지 갔다. 민주당이 150석은 쉽게 넘긴다고 했는데 됐다"며 "그때랑(지금)이 아주 유사한데 여론조사 추이가 매우 안 좋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으로 "4월 총선은 민주당이 정권 심판에 대한 반사이익과 진보 세력과의 '아연 연대'만 철석같이 믿은 2012년 총선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무사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녹색정의당, "비례연합 불참 대신 지역구 연대 추진"

녹색정의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불참하는 대신 접전 지역구에서는 야권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 연합과 지역구 후보 연대 입장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구는 연대하고 비례대표는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게 윤석열 정권 심판 명분을 극대화하고 유권자 사표는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윤 정권 심판과 중단없는 정치개혁 위해 폭넓은 정책 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전날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한 비례연합정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상임대표는 민주당총이 '거대 야당 지지 행위 금지'를 정치 방침으로 정한 것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는 윤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처방전에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이 존재한다"며 "이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수영장 확충 어르신 100세 건강 보장’

민주 황현선 예비후보, 어르신 복지 강화 등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예비후보(전주병)가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앞서 월 3만원으로 '청년·청년·65세 이상 어르신 전주 시내버스 무료 교통패스' 등 5개 핵심 공약에 이어 교통의 질 향상을 위한 '어디에도 없는 선(善)한 케어' 복지 부문 첫 번째 공약으로 어르신 대상 정책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노인 운동 종목이자 가파른 증가 추세인 노인 수영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실내 수영장 확충을 제시했다.

전주 덕진구(송천동 전라교 이전 부지, 호성동·우아동, 반월동·조촌동) 내 실내 수영장 건립으로 노인 세대뿐 아니라 덕진구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요양병원 간병비 지속 확대도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 파크골프장 확대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황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고

령인구는 2022년 41만 1,0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약 30.1%, 10명 중 3명이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2050년에는 4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은 매우 심각하다"며 "노인 복지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다"고 말했다.

또한 황 예비후보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배상'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 했다.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것.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양곡 구입비와 병난 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서울 20%)을 분담하고 있다.

결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황 후보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 구입비 외에도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비가 축소된 전북의 경우 국비 증액은 각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취재반